

# 노인수발보장도입 : 사회복지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도입에 도입하기 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민은 치매나 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를 인식하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 같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미래에 동시 다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뒤늦은 해결은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과중한 부담으로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발보장에 대한 정부안에 따르면 기본 형태는 독립된 사회보험방식체제로 일반 국민은 사회보험을, 빈곤계층에게는 공적부조체제로 이원화하고 있다. 재정조달 및 비용 부담은 3자 부담원칙으로 가입자와 정부 부담 그리고 이용자부담에 의한 분할 재정부담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체계 및 정부지원 체계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산출방식과 국고부담체제와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다. 서비스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20% 이다. 단 공공부조대상자는 전액국가에서 부담(차상위계층은 10%)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수발대상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가 서비스 대상자이며,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현금급여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수발서비스는 수발 등급을 판정해서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달리하며, 현재는 최중증(1,2급)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수발보험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체제에 흡수 또는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수발보호를 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할 경우에 제도의 미성숙, 국민적 신뢰 확보 미흡 등으로 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제도로 결정할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수발보험에 대한 논란 대상은 상당히 많다. 도입시기의 적절성이나 사회보험형태 여부에 대한 우려, 현금과 현물급여에 대한 공방 그리고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뜨거운 감자이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중요한 정책과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커다란 결점을 보이고 있다. 소위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가장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설과 인력 인프라 문제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발보장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기여할 영역이면서 한편 사회복지의 미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이미 수발복지협회 만들었고...”,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선전하는 신문 광고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만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학생을 동원해서 플래카드도 붙여서 수발요원은 우리 몫을 확고히 하고 있는 데, 이정도 준비하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회복지에서 수발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먼저 등급판정에서 사회복지적 요소 특히 가족상황이나 사회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알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 할 것인가? 현재 제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하면 혹시 기존의 기초수급자를 수용하고 지자체로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과거 체제에

안주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민간영역과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발보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수급대상을 현저히 감소시켜 그동안 모자라다고 법석을 떨던 인력 인프라나 시설이 공급과잉이라는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사회복지계는 얼마나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지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복지가 스스로 수발보험의 급여 서비스 수준이 불충분한 문제를 지역사회복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는 지, 또는 그동안의 자원봉사에 의한 민간 수발서비스가 공공부문에 흡수된다면 향후 민간 사회복지 영역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고민은 의료와 간호 그리고 사회복지의 영역 싸움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가 노인수발이라는 종합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너무도 비어있는 사회복지 공간을 채워야한다는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에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제와 도약의 기회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이를 바라만 보고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될 것이며 도태될 것이다.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과감하게 희망을 찾아나서는 개척자로서의 모습으로 분발할 때이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